

행안장관 “호우 피해 큰 지역, 절차 단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임명 직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직행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의 주재로 임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호중 장관은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켜 (집중호우)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피해 지역 지자체들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령 건의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계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 물품 지원 등을 세심히 챙기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에 적극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피해 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 자원 지원을 비롯해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복구 및 일상 회복 지원에 나선다. 주택, 상가, 도로, 하천 등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피해 조사에 착수해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그는 “호우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장관, 취임 후 첫 중대본 회의 주제 “피해가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개월 이어진 장관 공백 신속히 메울 것”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 1책무”

상되는 만큼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하천·계곡에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당장 오늘부터 많은 국민께서 피서를 떠나실 수 있는 만큼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물놀이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에도했다. 그러면서 “7개월간 이어졌던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임기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중대본 회의에 들어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제1 책무라는 소신을 갖고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재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다”며 “제가 흘린 땀방울과 제가 걸은 발걸음이, 무

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밀거름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회의 직후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과 당진 지역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한다.

당진 전통시장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점포를 살피면서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 상권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군 신안면 일대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현장에서는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임시주거시설도 방문해 이재민의 고충을 직접 경청하고 위로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취임식을 마치는 등 내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후부터는 재난 현장 방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1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 더 민생회복 소비쿠폰 못받는 기준은?

소비쿠폰, 2차지급 맨 소득 상위 10% 못받아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선별할 듯 직장가입자 27만원, 지역가입자 21만원 수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끝나면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이 9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과 달리 전 국민의 90%에게만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봉 7700만원, 납입 건보료 월 27만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위 10%의 보험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본인 부담 기준),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전액 부담 기준) 정도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대체적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또 모든 가구에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이번 2차 지급은 2021년 소득 하위 88%에 25만원씩을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당시에는 가구원 수와 맞벌이·외벌이 여부 등에 따라 지급 기준

이 달랐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건보료 본인부담금 17만원이 지급 기준이었다.

외벌이 2인가구 직장 가입자가 20만원, 지역 가입자가 21만원이었고 10인 이상 가구(직장 64만원, 지역 67만원)까지 9단계로 기준이 설정됐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가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높아졌다. 10인 이상 가구는 직장 가입자 64만원, 지역 가입자 67만원이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도 피부양자는 부양자와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도 지급과 사용 방법은 1차 때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각 지역별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2021년 지급 때도 건강보험료 조정, 가족구성원 변경, 소득 산정 등에 대한 46만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정부가 이의 신청을 대거 수용해 실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에서 90%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뉴스1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공방... 與 “협조해야” 野 “무자격자 사퇴해야”

국힘, 강선우·이진숙 등 사퇴·지명철회 촉구

김병기 “두 후보 결격 사유 못 찾았다... 일관적”

여야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로 소관 상임위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청문 결과 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된 후보는 총 4

명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일부 인사의 낙마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 했지만,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의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또 폭우 피해 상황을 감안해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및 기재부 장

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청문결과 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의힘의 원내 청문 전략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15일 청문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돼 같은날 임명안이 재가됐다.

다만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제출 문제와 증인·참고인 미채택, 도덕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낙마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전일 통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집중한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교육위원회도 지난 18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이 후보자) 두 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 한 분(강 후보자)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이 후보자)은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뉴스1

한강건설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